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일 목요일 (음 4월 27일) 제15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시골학교 통폐합하는 교육부

시군 교육지원청 구조조정 움직임

학생 수 감소 따른 '조직 효율화' 명분 내세웠으나
교육권 침해 · 지역교육기반 붕괴 우려 목소리 커

시골학교 통폐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엔 지역 군 단위 교육지원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구조조정 명분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권 침해는 물론 지역 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추세에 맞춰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1~2개 이상의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 급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앞으로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단일 과 수준으로 몸집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기준인 인구수와 학생 수에 못 미치는 전북지역 교육지원청은 총 5곳에 해당된다.

전국으로 보면 경북(8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어 전남(4곳), 강원(3곳), 경남·충북(2곳), 충남(1곳)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5곳은 주로 동북부 지역으로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다.

이들 지역의 유·초·중등, 공·사립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한 학생 수는 채 3,000명이 되질 않는다.

이날 기준 무주군 총 학생 수는 2,500여명, 진안 2,200여명, 장수 2,400, 임실 2,200, 순창 2,800여명이다.

이들 지역 모두 교육부기준 인구 3만 명 미만에 해당되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셈이다.

5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전북 교원은 평균 30~40여명으로, 통상 2개 과인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에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해당 구조 조정안까지 강행할 경우 '교육권 침해'는 물론 '교육행정 질 하락'에 따른 '지역 교육기반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면지역 학생 수 60명, 읍 지역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통폐합하라는 권고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초등학교 419곳 가운데 235곳이 해당되며 전체의 56%가 통폐합으로 사라져야 한다.

중학교도 98곳이 통폐합 권고 대상이며 고등학교도 18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도심지와 읍 지역 몇 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학교도 없어지고 이를 지원할 기관도 점차 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해당 정책은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실정을 충분히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1일 원광대학교 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UP

'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도내서도 뜬다

신속 응급이송시스템 갖춰
의료 취약지역에 도움 기대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견인할 '하늘 위의 응급실' 닥터헬기가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지역에 이어 전북의 하늘을 누비게 된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광대 동문주차장일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출범식'이 1일 개최돼 닥터헬기가 본격적을 운용된다.

전북지역은 동부 산악지형, 서해안은 도서지역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속하고 있어,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북도는 2015년 12월 원광대학교병원을 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선정, 국립중앙의료원 및 ㈜유아이헬리제트(헬기 운용사)와 함께 닥터헬기를 신규 도입하기에 이른다. 현재 닥터헬기는 계류장 선정, 가상환자 발생 종합시뮬레이션 훈련 및 환자 인계점 관숙비행 등 본격적인 환자이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출범식 후 2016년 6월2일부터 닥터헬기가 본격적인 운용을 하게 되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 신속한 응급의료이송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과 헬기이착륙장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등 사는 곳이 취약하다고 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전주단오' 3년만에 개최

'에헤라~ 덕진연못 물맞이가세'

9일부터 이틀간 덕진공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전주단오'가 3년 만에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대에서 '에헤야~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가세'를 주제로 한 시민참여 대동 어울림 한마당 잔치인 2016 전주단오 행사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법인이 주관하는 전주단오 행사는 천년 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주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축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명절로 손꼽혀왔다.

특히 단오는 대동적인 기원과 세시풍속, 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등 흥겨운 날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전주단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덕진연못은 고유의 풍습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올해 전주단오 행사는 단오 물맞이 행사의 일환인 창포물에 머리감기, 창포족욕 체험 등 대표 프로그램과 함께 전주시 33개동 참여대회로 확대된 씨름대회와 그네뛰기, 윷놀이가 시민참여 경연대회로 진행된다.

또한 아마추어 시민장사 겨루기와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경연도 진행된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전주단오행사에는 시민들이 단오 전통음식인 수리취떡을 직접 만들어 보고, 앵두화채, 제호탕을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오색실로 매듭을 하여 손목에 묶으면 잡귀를 쫓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졌던 장명루체험과 단오부적찍기 등이 진행된다. 도리깨와 지게 등 옛 전통생활도구 체험과 짚풀공예 체험, 짚풀공예 장인의 시연 등도 올해 첫 선을 보인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 내 25여 아마추어 시민예술단체들이 솜씨를 뽐내는 단오풍류공연과 올해로 벌써 11회를 맞는 풍남춤페스티벌 전국무용대회가 펼쳐진다. 특별초청공연으로 수원시립공연단원들이 준비한 '관무재' 뮤지컬공연도 마련된다.

밤 9시까지 진행되는 야간프로그램으로 덕진공원 정문을 환하게 밝히는 단오등에 소원지를 달아 가족의 건강, 합격기원, 사랑을 기원하는 소원지달기 행사와 덕진공원의 나무 조형물과 조명을 활용한 포토존 행사, 단오풍류공연 등이 마련돼 늦은시간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을 맞이한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5면 '한국판 잊힐권리' 본격 시행
6면 도내 자치단체 수의계약 금액 높여야